늙고 홀로되는 전남…2047년 고령자 가구 60%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70%
전남 '중위 연령' 69.6세 최고
'부부+자녀가구' 9.8% 최저

28년 뒤인 2047년에는 전남지역 5가구 중 3가구는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해 전남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 2017~2047년'을 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7년 399만8000가구에서 2047년 1105만8000가구로 2.8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 고령자 가구는 광주 26만3000명·전남 46만9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47년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남이 59.9%로 가장 높았다. 이는 평균 49.6%를 크게 웃돌았고 경북(57.7%)·강원(57.3%)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 연령'은 전남 69.6세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도 전남 69.2%로 강원(67.0%)·경북(66.7%)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1인 가구'를 비롯한 전남지역 핵가족화는 심화된다. 2017년 기준 전남지역 1인 가구 비중은 31.6%였지만 2047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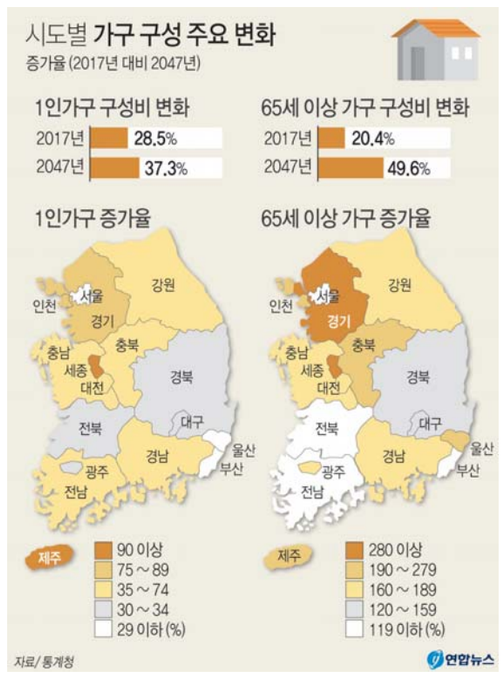
2.31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30년 뒤 1.9명으로 떨어져 한 집에 두 명이 채 살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47년 광주 1인 가구 비중은 39.6%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2.04명으로 나타났다.

향후 30년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부부+자녀가구' 비중은 20%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047년에는 전남지역 '부부+자녀가구' 비중이 9.8%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광주지역은 여성 가구주 비중이 전국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광주지역 여성 가구주 비중은 3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로부터 30년 뒤인 2047년에는 41.0%로, 서울(4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7년 한부모 자녀가구 비중은 광주가 12.3%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고 2047년에도 인천(10.9%)과 함께 광주(10.8%) 한부모 자녀가구 비중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퍼포먼스 2020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출범식이 16일 오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공동위원장 전남 류중구·경남 조세윤, 운영위원 등 참석자들이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내년 농업분야 예산 6678억 확보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친환경 유기농업타운 조성 등 탄력

전남도가 내년에 농업 분야의 혁신과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전남도는 16일 "2020년에는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등 사업비가 포함된 6678억원의 농업 관련 예산으로 '블루 농업(Blue Farm)'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농업 분야 핵심 3개 사업인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첨단 농업기계화(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도 반영됐다.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원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에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비로 13억원을 확보했다. 아열대 작물의 실증 연구를 통한 표준재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소득작물을 보급확산하고, 아열대 과일의 수입을 대체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첨단 농업기계화(무인·자동화)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7억원이 반영됐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80억원을 들여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로봇, 드론, 인공지능 기반의 노지 커넥티드 팜 시범단지와, 첨단 농기계(AI) 플랫폼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구례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19억원이 반영됐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유기농 체험단지, 가공·마케팅센터, 생태체험농장, 홍보 및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갖추게 됐다.

이외에도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및 운영(신규사업 150억원)사업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원,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계속사업 100억원)을 위한 생산·연구시설 구축비 24억원을 확보했다.

섬지역 농산물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실증연구 예산 8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해상운송비 지원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예산으로 확보된 국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양파·마늘 수급 조절 의무자조금단체 추진

전남도, 내년 2월까지 회원 접수

전남도는 양파, 마늘 수급 조절을 위해 해당 경작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는 정부와 전라남도가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주요 채소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15일간 무안 등 8개 시·군 순회설명회를 실시했다. 이후에도 농가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주산지 중심 추가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계속 펼칠 예정이다.

회원 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양파, 마늘 생산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신청을 바라는 경작자는 주산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조금단체는 사전적 수급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단위 기구와 시군단위 실행조직체로 구성한다. 자조금 조성 시 초기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지원하는 한편, 정책사업을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품목 전체 농가 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절반이 넘어야 하므로, 양파, 마늘 최대 주산지인 전남 농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사회공헌위원회 첫 회의

민간협의체 운영·혁신포럼 개최

광주시는 16일 광주시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려 만들어진 '광주시 사회공헌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광주시·시의회·복지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위원을 위촉하고 내년도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업 계획은 민관협의체 운영, 민관협력사업 유치, 혁신포럼·박람회 개최, 사례집 발간, 명예의 전당 조성, 우수기관 인증 등이다.

시는 지자체·유관 기관·민간 기업 담당자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주간을 운영하며 사회공헌활동 전시·홍보,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조사하고 경향을 분석해 자료집을 발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개인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시는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공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3개(국민·공무원·사학) 연금공단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7월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식을 열고 15개 실행과제를 담은 사회적 가치실현 공동협약을 맺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전 광주시의원 제명 불복 소송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비례대표)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은 14일 광주지법에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지난 11일 의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의원직을 잃었다.

광주시의회는 나 의원의 결원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나 의원의 후임은 차순위인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승계받는다. 의회로부터 결원을 통보받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승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나 의원의 행정 소송과는 관련 없이 후임자 승계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다른 동료의원과 함께 내기로 한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